장희경. 2018. “한반도 정세변화와 평화체제.”『인권연구』1(2): 31-63.
Chang, Hee Kyoung. 2018. “A study on recent chang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eace regime.” *Journal of Human Rights Studies* 1(2): 31-63.

[일반논문]

한반도 정세변화와 평화체제
: 젠더적 국제정치 관점의 입론

장 희 경*

한글초록

이 글은 2018년 현재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세변화—3차례의 남북정상회담, 1차례의 북미정상회담—가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 증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혹은 평화와 인권의 증진을 위해 어떤 접근이 필요한지를 젠더적 국제정치의 관점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시론적 성격의 글이다. 2018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1차례의 북미정상회담으로 정전체제의 종식과 평화체제의 수립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그럼에도 평화체제의 수립을 위해서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과정이 남아 있다. 지금까지의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주로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이라는 제도적 차원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이 글에서 제도적 차원의 평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평화를 획득할 수 없는 것인지, 제도적 평화가 정착되면 완전히 평화로운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젠더적 국제정치는 갈퉁이 제시한 전쟁의 부재를 넘어 구조적 폭력의 제거가 평화라는 적극적 평화의 개념을 공유한다. 젠더적 국제정치는 구조적 폭력을 넘어 폭력을 발생시키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이분법이라는 가부장적 체제의 제거, 나아가서는 차이와 정체성의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으로 평화 개념을 확장한다. 한반도는 오랜 분단으로 물리적, 구조적 폭력뿐만 아니라 문화적 폭력에도 노출되었다. 따라서 실질적인 평화와 인권의 증진을 위해서는 제도적 평화를 넘어서,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서는 인식론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비판 이론으로서 젠더적 국제정치의 관점은 확장된 평화 개념을 제시할 것이다.

* 베를린 자유대학교 한국학과.

www.kci.go.kr

ISSN 2635-4632

주제어: 젠더적 국제정치, 평화체제, 구조적 폭력, 인간안보, 인식론적 재구성

목 차

Ⅰ. 서론
Ⅱ. 기존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Ⅲ. 젠더적 국제정치로 보는 한반도 분단과 평화
Ⅳ. 결론

Ⅰ. 서론

2018년 들어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 상태에서 화해와 평화 분위기로 급격히 전환하였다. 2017년 북한은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발사 실험에 성공을 거두면서 한반도에 긴장을 가져왔다. 미국과 유엔은 북한에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물론 군사적 행동까지 고려하면서 긴장이 심화되었다. 그러다 2018년 2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이 올림픽에 함께 참가하고 핵미사일 실험을 사실상 유예하자, 한반도는 4월 27일 1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판문점 선언', 6월 2차 남북정상회담을 거쳐 6월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을 내고, 9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평양선언'을 이끌어내면서 획기적인 전환을 맞이하였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는 남북 사이에 냉전의 산물인 분단과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의 시대를 선언하였다. 특히 3조에서는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

www.kci.go.kr

다"고 밝혔다. 이는 1953년 정전 이후 65년을 지탱해온 분단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동시에 언급함으로써 평화체제 실현의 현실성을 높였다. 이는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유엔연설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이후 부침을 거듭해 온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담론이 현실적 정책으로 재등장한 것이다.

지금까지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남북한 사이에 여러 차례의 시도가 있었지만 국제체제적 요인과 국내정치적 요인 때문에 추진과 좌초를 거듭해왔다. 아직 평화체제가 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한반도는 여전히 정전협정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 평화협정이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한과 북한은 늘 군사적 대결을 준비해야 했고, 안보적 긴장 상태에서 남한과 북한 내부의 인권이 유린되는 역사를 경험했다. 남한의 경우는 국가보안법이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정치범이나 사상범으로 몰려 인권을 침해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이 한반도의 분단이 내부의 평화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분단이 구조적 폭력으로 작용하여 내부의 평화와 인권을 저해했다(서보혁, 2015).

그런 점에서 2018년에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1]에 대한 초기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밟는 과정은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의 진전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평화가 단지 개인의 권리가 아닌 집단의 권리로서 평화권은 인권신장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정진성, 2018). 세계인권선언 28조에 인권이 실현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사회적·국제적 질서(a social and international order)"가 수립되어야 함을 명시하였다(조효제, 2018). 이 관점에서 한반도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인권의 전제조건이 평화권이 수립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1) 평화는 '체제'로 형성되기 어려운 논쟁적 이슈영역이지만, 한반도에서 분단을 극복하는 제도화의 형태로 '평화체제'라는 용어를 쓴다(구갑우, 2016)

www.kci.go.kr

그러나 판문점 선언과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추진하는 과정은 복잡하다. 그렇다면 현재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았지만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평화상태인가? 또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평화와 인권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런 질문에 기반해 이 글에서는 군사적 힘을 다루는 '상위정치(high politics)'로서 국가안보 개념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제공하는 젠더적 국제정치의 관점에서 변화하는 한반도의 정세와 평화, 인권의 향상을 위해 고려할 지점들을 시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기존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1.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역사적 시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은 역사적으로 지속되어 왔지만, 수많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지 못했다. 1954년 제네바 협정에서 '외국군대의 철수'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이는 정전 체제의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이후 미·중 데탕트 분위기에 편승하여 1972년 '7·4 남북 공동선언'을 통해 민족 통일의 원칙에 합의하였지만 이는 평화체제와는 거리가 있었다. 민족 통일이라는 원칙에 합의했지만 각자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방식의 통일을 염두에 둔 '적대적 공존'(백낙청, 1994) 체제였다.

1990년 사회주의권이 붕괴하면서 체제 붕괴와 고립을 두려워한 북한은 1991년 남한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기본합의서)'를 채택한다.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의 체제와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18조에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 상태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에 합의했지만, 이는 적극적 평화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사회주의권 붕괴에 따라 불안감을 해

www.kci.go.kr

소하기 위해 '상호불가침'에 역점을 둔 한계가 있다. 게다가 북핵 문제가 불거지면서 평화조약보다 북미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게 되면서 남북관계는 미국의 정책에 종속되는 계기가 되었다(구갑우, 2016: 160).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2000년대에 들어와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전기적인 선언들이 이어졌다. 2000년 '6·15 공동선언'이 남북 정상이 최초로 만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본적 원칙과 토대를 마련했다면, 2007년 '10·4 공동선언'은 '6·15 공동선언'의 유효성과 지속성을 확인한 상태에서 정전체제 종식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햇볕정책'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여 우선 경제부문의 교류 협력이 확산되면 정치적 통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신기능주의적 관점[2]에 입각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즉 냉전과 분단체제로 형성된 남북한의 군사적 대립 구도는 경제적 교류와 협력만으로는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구갑우, 2007: 73). 노무현 정부에서는 햇볕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동시에 추진하고자 했으나, 정권 말기에 합의된 '10·4 선언'은 합의이행을 위한 실천적 동력을 획득하지 못하였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에 대북 정책은 북한의 비핵화와 안보가 최우선 목표였다. 소위 '진보 정권 10년'동안 햇볕정책은 북한에게 핵을 개발할 시간적 여유와 물질적 지원을 해준 것으로 평가하고,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북한을 고립시키고 제재하는 강압정책을 추진하였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2) 하스에 의해 제시된 개념으로 국가는 여러 기능들이 결합된 하나의 총체적 조직인데, 민족국가가 단독으로 기능을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관점으로 진행된 것이 유럽의 석탄철강공동체(ECSC)이다. 이러한 경제적 협력이 '파급효과'(spill over)를 이루어 정치적 통합까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Haas, 1958).

www.kci.go.kr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 CVID)'를 이루기 전까지는 교류·협력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남한은 강력한 힘을 가진 미국과 일본과 군사적 동맹을 강화하여 경제적 제재뿐만 아니라 군사적 억압을 동원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일환으로 미국이 추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에 가입하고, 북한의 핵을 견제하기 위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를 배치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는 국제질서의 무정부 상태를 기본으로 상대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다고 보는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여 군사적 힘에 대응하는 군사적 힘을 갖추고 안보를 획득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행동 원칙이라고 보는 신현실주의 관점[3]에 입각한 접근이다. 이러한 억압정책은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중국이 군사적으로 무장하도록 유인하는 동기가 되었다. 이처럼 외부의 질서를 무질서와 불확실성으로 인식하고 안보를 획득하기 위해 군사적 힘을 강화하는 접근은 같은 논리로 상대의 힘의 추구, 무장화를 야기한다.

2. 판문점 선언의 의미

남북관계가 단절되고, 북미 긴장이 고조되던 시점에,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한반도 안보 상황을 우회하여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는 평창올림픽이라는 '하위정치(low politics)'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나 현송월 단장이라는 여성 리더십의 등장과 2018년 4월 27일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모습은 '상위정치(high politics)'의

3) 월츠가 정리한 이론으로 국제질서는 무정부 질서라고 가정하고, 그 안에서 국가가 유일한 행위자로서 자구(self-help)를 통해 국제질서의 균형이 확보된다는 논리이다. 이론의 명료함을 위해 국가 이외의 행위자를 제거하고, 국제정치를 체제(system)차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Waltz, 1979).

www.kci.go.kr

높은 경계를 넘는 신선한 국면이었다.

그 과정에서 탄생한 판문점 선언은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서 처음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를 동시에 언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구갑우, 2018: 29). 한반도 비핵화는 냉전이 해체된 직후 북한이 체제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991년 12월 31일 남북 사이에 체결한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에서 처음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이후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부침을 거듭해왔다. 2018년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 평화 정착의 조건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이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밝혔다. 비핵화만을 강조하던 신현실주의적 접근도 아니고, 교류·협력을 통해 정치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자유주의적 접근도 아닌 두 관점의 동시적 이행,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보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판문점 선언 3조에는 먼저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로 시작한다. 비정상적인 정전상태를 폐기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역사적 과제임을 확인했다. 그를 위해 우선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언급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군사적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군축을 실현하기로 합의했다. 군축은 군사적 방법을 줄이고,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실천이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3항에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과정이 명시되었다. 즉 2018년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평화협정 체결을 의제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구갑우, 2018: 31). 즉 평화체제의 제도화를 명시한 것이다. 이는 평화협정 체결이 남북 당사자 사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주변 국가와 국제체제의 단위에서 중요한 행위자인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평화체제가 수립될 수 있다고 인식했다는 점에

www.kci.go.kr

서 2000년 '6·15 선언'에서 진일보하였다. 나아가 2018년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안전보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국제적 차원에서 인정을 받은 셈이다.

3. 기존의 평화체제 논의: 구조적 폭력을 제거한 적극적 평화

현재 판문점 선언이 평화체제를 제도화하는 초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의 한반도 평화 체제 논의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제도화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 접근으로 중국과 미국이라는 동북 아시아의 힘의 분포 구조나 북미관계의 개선이라는 힘의 균형이 변화할 때 가능하다는 구조주의적 입장과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해 평화협정을 제도화할 수 있다는 제도주의적 입장으로 나뉜다. 구조주의적 입장은 남북관계의 개선보다는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강대국이자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평화협정에 동의를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시행했던 정책은 북한의 핵이 힘의 비대칭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가 모든 안보·평화 정책의 최우선 과제였다. 이는 힘의 균형을 통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신현실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정책이다. 힘의 균형을 갖기 위해 남한은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을 강화하는 '편승'(Bandwagoning)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논리였다. 그러나 이러한 신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채택한 정책들, 예를 들어 사드 배치, 북한과의 교류를 전면 중단한 조치들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보다는 긴장을 확대시켜왔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떨어진다.

반면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해서 분단체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제도주의적 입장[4]은 단지 전쟁의 종식만이 아니라 남북 사이에 교류·협력

4) 로버트 코헤인(Robert Keohane)으로 대표되는 이론으로 협력을 이루기

www.kci.go.kr

을 제도화함으로써 평화 공존 상태를 만들자는 것이다.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은 분단의 존재로 각각의 기득권이 이득을 유지할 수 있고, 적대적 상대의 존재로 서로 이득을 유지하는 '독특한 상호적대와 상호결합의 굳건한 결합구조'(백낙청, 1994)[5]로 분단의 국제 체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민중을 억압하는 장치로 작동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즉 분단이 전쟁의 위협만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분배 정의까지 해치는 구조적 폭력(structural violence)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분단이라는 구조적 폭력을 제거하는 적극적 평화의 관점이 자주 논의된다. 즉 갈퉁이 제시한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란 전쟁이 없는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만이 아니라, '사회적 불의(social injustice)'를 의미하는 구조적 폭력(structural violence)이 제거된 상태를 의미한다(Galtung, 1969). 갈퉁이 말하는 구조적 폭력이란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

위해 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유럽 통합의 과정에서 유럽철강공동체나 헬싱키 프로세스와 같은 제도가 성공 요인이라는 것이고, 이를 한반도 평화체제에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5) 김종엽은 분단체제를 "남한사회와 북한사회가 서로 분단되어 따로 떨어진 자족성을 가지면서 단지 역사적 기억과 문화적 전통 속에서 통일을 바라는 두 체제가 아니라, 각자의 재생산이 상대를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는 상호의존성을 가진"것으로 파악하였다(김종엽, 2005). 이병천은 "냉전분단체제"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는 "전후 한국이 미국 헤게모니하의 반공 진영 속에 편입된 것뿐만 아니라 남북이 전쟁을 통해 남의 우익 권위주의와 북의 좌익 전체주의가 서로 대결하면서 공생하는 대결적 상호의존 관계를 확대, 재생산해 온 것"이라고 정의한다(이병천, 1995).

그러나 백낙청의 분단체제에 대해 분단이 세계 냉전체제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구조라는 인식이 부족하고(이종석, 1998), 분단을 모든 것의 원인으로 귀착시킴으로 국내 권력·정치적 차원에서 위협을 조작하는 부분을 읽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오히려 남북이 적대적 의존관계보다는 적대적 경쟁의 관계라는 주장이 있다(손호철, 1994; 손호철 • 방인혁, 2012)

www.kci.go.kr

를 실현하기 위해 자원 분배를 결정하는 권력이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물리적 폭력만이 아니라 빈곤과 기아, 환경 등도 평화를 저해하는 근본적인 폭력을 의미한다. 이 구조적 폭력 개념이 분단체제론과 같은 논리로 이해된다. 즉 한반도의 분단은 안보적 긴장뿐 아니라 남한과 북한 각각에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를 억압하는 장치로 작동되어 왔다. 따라서 한반도 분단의 해소를 위해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소극적 평화 차원뿐만 아니라 적극적 평화를 구축하자는 것이 일반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주를 이루었다.

2018년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의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 체제 구축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평화체제의 제도화를 목표로 상정하고, 그 실질적 단계로서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과 북미협상 이후에도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제재 해제를 둘러싸고 의견의 차이가 있고, 남북 교류·협력도 여전히 유엔과 미국의 제재 국면과 충돌하는 과정이 이어지고 있다. 평화가 전쟁의 부재만이 아니라 구조적 폭력을 제거하고, 비평화의 원인이 되는 사회내적 요인과 군사주의적 문화의 제거(Senghaas, 1972; 이동기, 2012: 55 재인용)까지를 의미할 때, 평화와 인권의 진전을 위해 안보 개념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즉 국가 대 국가 사이의 전쟁부재라는 안보 개념에서 구조적 폭력에 노출된 개인의 안보까지 확장된 인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안보 개념에 대해 인식론적인 성찰을 던지는 젠더적 국제정치의 관점이 현재의 분단체제와 그 극복의 과정으로서 평화 수립의 과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이다.

Ⅲ. 젠더적 국제정치로 보는 한반도 분단과 평화

1. 젠더적 국제정치이론

www.kci.go.kr

젠더적 국제정치이론[6]은 기존의 국제정치이론에서 의문의 여지가 없었던 기본 개념들을 비판하면서 등장했다. 이는 이론적 발전에 따라 두 세대로 구분된다(Tickner, 2006: 30). 1세대 페미니스트 국제정치학은 전통적인 국제정치학의 기본 개념들, 즉 국가, 무정부 질서, 국가의 자구(self-help) 행위를 남성성이라고 비판하는 입장(the critical stance)이라면, 2세대 페미니스트 국제정치학은 탈냉전 지구화의 맥락에서 국가 중심적 서술을 넘어서 정체성 정치를 통해 안보의 영역을 인간차원으로 확대하였다. 이를 젠더적 국제정치학이라 부른다.

페미니스트 국제정치학이 분과학문으로 처음 등장한 것은 1988년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밀레니엄(Millennium)』에서 "여성과 국제정치(women and international relations)"를 특별호로 다루면서부터이다. 현실주의 국제정치가 가정하는 국제사회의 조건, 즉 홉스의 무정부적 상태에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폭력을 소유하는 국가는 남성성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외부의 폭력으로부터 가족을 지키는 것은 남성이고 그 보호의 대상이 여성이라는 가부장제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일부 페미니스트 평화 연구에서는 남성성은 폭력과 관련 있고, 여성성은 평화와 상관관계가 높다고 주장한다(Bruguieres, 1990).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가부장제에서 인식하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이분법

6) 국제정치이론이 남성성에 기반한 패권적 가부장제를 반영한다고 비판하는 접근을 주로 페미니스트 국제정치학(Feminist International Relations)라고 명명한다. 페미니스트 이론은 주로 젠더 관점을 분석의 도구로 기존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지만, 여성과 관련된 정치적 의제를 강조하고 실천적 방안에 중점을 둔다. 페미니스트 국제정치학자인 실베스타가 지적한 것처럼 페미니스트 국제정치학 안에서 여성의 문제를 강조할 것인지, 젠더 관점에 따라 소외된 사람들을 강조할 것인지에 대한 긴장이 있다(Sylvester, 2007). 이 글에서는 젠더적 시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을 개별 인간의 차원으로 확대하고자 하기 때문에 젠더적 국제정치학(영어로는 주로 gender approach in International Relations)이라고 명하고자 한다.

www.kci.go.kr

적 인식 논리와 같다. 따라서 젠더적 관점으로 국제정치를 분석할 때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본질화(essentialization)하는 방식을 경계하고, 현실에 드러나는 불평등 구조와 원인을 분석하고 설명하기 위한 틀을 젠더 관점으로 볼 것을 요구한다. 이는 젠더화된 현실을 뒤집어 인식하게 하는 인식론적 전환이다(Carver et. al, 2003).

젠더(gender)개념은 남성성과 여성성이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남성들과 여성들의 관계를 조직하는 사회적 규칙"(스콧, 2001)을 의미한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구성된 젠더 관점에 따라 권력이 남성성을 중심으로 편재된 가부장제가 불평등의 근본이라고 본다. 이러한 젠더적 접근을 국제정치에 적용하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는 국가가 남성성을 대변하는 것이라면, 국가의 '보호'를 받는 대상은 여성성으로 간주되는 이분법적 구조가 국제정치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여기서 젠더적 국제정치는 '보호' 개념을 비판한다. 즉 보호란 안보를 확보하는 것보다 "안보를 위해 복종/종속을 거래(the exchange of obedience/subordination for (promises of) security)" 하는 것으로 국가의 힘을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Peterson, 1992: 50). 또한 가부장제가 남성성과 여성성을 전형화하고 이분법적으로 인식하는 것처럼 현실주의가 전제하는 무정부 질서는 국내/국외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면서 국외 위협으로부터 안보만 강조하면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안보의 문제를 사장시킨다고 비판한다(Tickner, 1992; Peterson, 2004). 젠더적 국제정치론도 이분법적 젠더에 기반한 가부장제가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내부의 다양성을 억압하고, 특히 여성의 안보를 위협하는 구조적 폭력으로 작동한다고 분석한다. 특히 국가안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혹은 달성된 이후라도 개인의 불안, 특히 여성과 관련한 젠더 불안정은 오히려 더 심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은 국가 중심의 안보개념에서 벗어나 개인의 신체적, 경제적 안정을

www.kci.go.kr

안보의 개념에 포함하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 개념을 제시한다(Tickner, 2005: 327). 인간안보 개념은 냉전종식 이후 내전과 난민, 빈곤과 기아가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로 부각되면서 등장했다. 1994년 유엔개발계획에서 출판한 '인간개발보고서(the Human Development Report)'에서 최초로 주창되었다. 기존의 국가안보 개념에서 그 대상과 영역을 확장한 것이다. 즉 모든 인간이 군사영역뿐 아니라 경제, 정치, 문화, 보건, 교유 등 인간의 삶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이혜정·박지범, 2013). 이처럼 젠더적 국제정치는 인간안보, 적극적 평화 개념을 적극 활용한다(황영주, 2013).

이는 전쟁이라는 물리적 폭력의 제거만이 평화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권리'에 해당하는 자원의 배분을 결정하는 권력이 불공정한 상태의 구조적 폭력과 일맥상통한다. 혹은 전쟁이 부재함에도 평화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 즉 비평화(Peacelessness) 개념과도 맞닿아있다. 비평화 개념은 인도의 평화학자 수가타 다스굽타가 1967년 국제평화학회에서 "비평화와 나쁜 개발(Peacelessness and Maldevelopment)"라는 논문에서 개념화했다. 즉 제3세계에서 전쟁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빈곤, 기아, 영양실조, 질병, 오염 등으로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일컬어 비평화로 설명했다(서보혁, 2012). 이는 자원의 배분이 불의하여 발생하는 빈곤, 기아, 환경문제를 제기한 갈퉁의 구조적 폭력의 개념과 유사하다. 이들은 모두 전쟁이 없는 상태는 소극적인 평화의 단계일뿐이고, 이러한 구조적 폭력을 제거한 적극적 평화를 추구하고자 했다.

그러나 젠더적 국제정치론은 모든 인간들이 균질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불평등하게 만드는 근원적 구조로서 가부장제, 그것을 뒷받침하는 문화로서 젠더적 시각에 문제를 제기한다. 갈퉁은 1990년에 와서 신체적,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화의 측면을 '문화적 폭력 cultural violence)'으로 정의하며[7] 적극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

www.kci.go.kr

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문화적 폭력이 작동하는 방식이 젠더적 관점이다. 사회적 구성으로서 젠더는 이분법을 통해 사회적 삶에서 주종관계와 같이 위계적이고, 상호배제적인 카테고리를 만들어낸다. 이는 폭력이 비폭력을 넘어 갈등을 끝내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젠더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우월한 상태를 구성하거나 정당화하는 문제가 있다(Confortini, 2006). 따라서 젠더적 관점에서 폭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젠더적 관점에서 해방되어 개별 인간 본연의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평화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젠더적 국제정치론은 남성성/여성성이라는 이분법적 인식과 그에 따른 차별의 폭력성을 드러낸다. 2005년 스웨덴 정부가 젠더 개념을 "한 개인에게 사회적 젠더 정체성을 구성할 때 결합되는 사고와 행위의 전체성(totality)으로 전통적인 남성/남성성, 여성/여성성이 그 자질이라고 개인에게 강요하는 집단적인 문화 과정"으로 '가부장적 폭력(Patriarchal violence)'이라고 규정하였다. 특히 퀴어(queer) 이론에서는 이성애(heterosexuality)를 젠더의 기본질서라고 보는 관점도 다양한 인간의 안보를 공격하는 가부장적 폭력으로 규정하였다(Webel and Galtung, 2007: 214). 따라서 젠더적 국제정치론은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 차이와 정체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평화의 개념을 확장한다.

젠더적 국제정치는 "단지 여성에 관한 것이 아니며, 남성 위주의 사회 구성에 여성을 부가시키기 위한 것도 아니다(Peterson 1992, 205)." 오히려 젠더적 접근이 갖는 이분법의 폭력성을 드러냄으로써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인식론적 전환을 요구한다. 콘포르티니(Confortini)는 갈퉁의 3가지 폭력(신체적, 구조적, 문화적 폭력)이 불평등의 체제와 구조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젠더적 관점(gender lenses)"로 보

7) 문화적 폭력이란 종교, 이데올로기, 언어, 예술, 경험적 과학과 형식과학 등과 같은 존재의 상징적 영역이 직접적 폭력이나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문화의 측면을 말한다(Galtung 1990, 29).

www.kci.go.kr

는 것은 여기에 차이와 정체성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Confortini, 2006). 불평등의 기원이 이분법적 젠더 문화이고, 이는 남성과 여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소외받은 이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차이와 정체성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보라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부분적이고, 규정하기 힘들고, 일상적이기 때문에 언제나 억압받고 소외받는 자들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Sylvester, 1994; 2007)이 젠더적 국제정치론이 제기하는 평화의 개념이다.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체제는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제도적 차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거나, 적극적 평화의 관점으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체제의 차원을 넘어 남한과 북한, 그 사이에 존재하는 인간의 실질적 안보/평화에 대한 시각이 부족했다. 실제로 북한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인식할지에 대해서도 복잡한 특수성이 있다. 즉 남한과 북한은 국제체제의 차원에서는 독립된 국가적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민족 차원에서 동질성을 가진다. 또한 분단의 원인을 냉전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무게를 둘 경우에는 한민족으로서 협력의 대상이 되지만, 내전에 중심을 둘 경우에는 적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런 관점에서 평화체제 이후 남한과 북한은 독립된 국가로 평화·공존할 것인지, 통일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시점에서 분단이냐 통일이냐, 협력이냐 적대냐의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라 '젠더 렌즈'로 한반도의 평화를 재구성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한반도 평화체제나 안보의 문제를 다룰 때, 소외되어 왔던 여성안보의 문제를 젠더적 국제정치 관점에서 다루어보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고려할 지점들을 '젠더 렌즈'로 살펴보겠다.

2. 한반도 분단과 여성안보

www.kci.go.kr

구조적 폭력으로서 분단체제는 평화와 인권을 저해하지만 특히 내부의 여성의 안보에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여성의 인권과 평화는 분단체제하에 더욱 불안정한 위치에 있다. 김현미는 "분단 체제는 남북 양쪽 체제의 경쟁과 경합 또는 적대 관계를 통하여 초남성주의적 군사문화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면서 그 논리와 체제 안에 많은 다른 가치를 종속시키고 위계화시켜 낸 구조"[8]라고 정의하며 분단이 남성적 군사문화와 결합된 지점을 지적하였다. 남한은 분단체제 때문에 초남성주의적 군사문화가 정당화되면서 또 거기에 가부장제가 결합되어 여성의 인권과 안보 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인권의 관점에서 그동안 소외된 여성안보의 문제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남한의 경우, 분단체제 때문에 군사정권 시기에는 '국가안보'가 국가정책의 핵심이 되었고, 국가 전체 예산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복지 예산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었다[9]. 또한 조건에 일치하는 모든 남성들은 병역의 의무를 지고, 그에 따라 공무원 시험에 군가산점제도라는 차별적 조치가 시행되었다[10]. 전쟁 가능성에 대비해서 민방위 훈련이 일상생활에 내재되어 있고, 조직 내에서도 비상상황에 대한 긴장감이 인간관계를 비롯한 사회 곳곳에 침투해 있다. 그 대표적 예가 군대의 존재를 회의 없이 받아들이고, 병역의무 자체를 신성시하는 군사주의적 문화가 팽배해있다는 것이다(권인숙, 2000: 130). 이러한 군사주의적 문화는 군대에 가는 남성을 우월한 존재로 보고, 여성을 남성에 의해 보호받는 종속적 존재로 보는 '문화

8) <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8196&section=sc1> (검색일: 2018. 10. 22).

9) 이를 '안보개발국가'라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평화복지국가를 제안한 연구가 있다. 윤홍식 엮음. 2013.『평화복지국가』이매진; 이병천 · 윤홍식 · 구갑우 엮음. 2016.『안보개발국가를 넘어 평화복지국가로』사회평론아카데미.

10) 군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가 여성과 신체장애자의 평등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결정내렸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등 위헌확인, 1999.12.23. 98헌마363 전원재판부).

www.kci.go.kr

적 폭력'(Galtung, 1990: 29)이다. 이 문화적 폭력은 군대내의 직접적 폭력이나 군대 주변의 성매매나 성폭력을 조장하거나 합리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또한 남한은 전쟁이 끝나지 않고 멈춘 상태에서 힘의 균형과 억지를 확보하기 위해 동맹을 통해 미국의 군사적 힘에 의존해왔다.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면서 미군 기지촌과 성매매 산업이 성행했을 뿐만 아니라, 미군이 저지르는 성폭력 범죄도 많다. 군사적 보호를 명분으로 파견된 미군이 있는 곳에는 성매매를 담당하는 기지촌과 성매매 산업이 발전했다. 이는 전형적으로 여성의 성이 국가 안보의 도구로 활용되는지를 보여준다(Enloe, 1989). 1970년대 미국이 닉슨 독트린 발표 이후 주한 미군을 철수하려는 계획을 세우자, 박정희 정권은 미군이 안정적으로 주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지촌을 설립하였다. 기지촌 여성들을 국가의 안보를 위한 '애국자'로 포장하고 성병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이 국가 안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식으로 설득했다. 이것은 분단체제가 여성의 성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안보와 연결시켜 억압하는지를 잘 보여준다(Moon, 1987).

남한의 근대화 과정에서도 여성은 개별적 노동자라는 주체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혹은 집안 남성의 출세를 위해 노동에 투입되는 도구적 존재로 인식되었다. 특히 경제발전의 시기에는 '산업역군'이라고 호명되며,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되어 노동자의 권리나 노동조건에 대한 인식 없이 근대화 프로젝트에 편입되었다(김은실, 2002). 뿐만 아니라 남한 정부가 경제성장을 저돌적으로 추진하던 1955-1988년까지 여성의 성을 관광 도구로 활용하여 외화벌이를 추진하는 성매매 관광 정책이 추진되었다. 1965년 한일국교가 정상화되면서 일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성매매 관광이 시작되었고,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 시기에도 추진되었다. 이는 남한 정부만의 문제

www.kci.go.kr

가 아니라 미국 상무성과 대외원조처가 일종의 발전 전략으로 여성의 성적 서비스를 관광 프로그램에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다(박정미, 2014: 235). 이처럼 경제개발의 과정에서 여성의 노동은 비주체적 형태로 동원되었다.

분단체제가 여성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젠더적 다양성을 포함한 다양성을 부정하고 억압하는 조건이 되었다.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권고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권고한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학력, 혼인 상태, 종교, 정치적 성향, 전과,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보수적 기독교 단체의 거센 반발로 폐지하였다. 보수 기독교 단체가 '동성애가 국가안보를 흔든다'는 프레임으로 분단체제를 이용하고 성적 다양성을 부정하기 위해 포장한 용어가 '종북 게이'이다. 즉 발의된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교회나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치게 되고, 김일성과 주체사상을 옹호하는 내용을 가르쳐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사람, 즉 '종북 게이'를 탄생시킨다는 논리였다. 이 '종북 게이'는 이후 페미니즘을 반대하는 용어인 '종북 페미'로 확장되면서 소수자와 다양성을 억압하는 혐오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배경에 국가안보 논리가 있다. 즉 성적 다양성을 가진 소수자를 안보 적대의 대상인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이라고 연계시킴으로써 성적소수자는 국가안보의 문제가 된다. 따라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성적 다양성을 억압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이다. 이와 같이 분단체제에서 성적 다양성이나 사상의 자유도 북한과 연결되면 억압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북한의 경우도 분단체제 하에서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사회주의 건설 단계에서부터 '여성의 노동계급화'를 추진했지만, 여성과 남성의 분야를 분리하였다. 즉 남성은 주로 중공업이나 농업, 건설과 같은 생산부문에 배치하는 반면, 여성은 경공업과 비생산부문[11]에 배치되었다. 특히 1985년 국제적으로 사회주의 체제가

www.kci.go.kr

와해되는 시점에서 체제보장이 북한의 최고 국정 목표가 되고 핵개발에 국가적 자원을 동원하였다. 이에 따라 중공업에 물자가 동원되면서 인민의 일상적인 생활을 감당할 경공업 부문의 발전이 저해되었고, 이는 인민의 생계 즉 경제적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젠더적 국제정치가 비판하는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의 안보 확보만을 강조하면서 발생하는 내부의 경제적 안보, 사회적 안보의 위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북한의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생계를 책임지는 행위자로 호명되는 것은 여성이었다. 1990년대 자연재해로 경제적 위기가 닥치고 국가경제가 마비되면서 장마당과 같은 '밑으로부터의 시장화'가 진행되었고, 그 시장화를 담당한 주역이 여성이었다(스미스, 2017). 상품유통과 상업은 비생산부문으로 여성의 역할이었으며, 상행위 자체를 폄하하는 북한 체제에서 경제적 안보 담당은 여성의 몫이었다. 한 연구에 나타난 설문조사를 보면 2002년 사경제활동을 부문적으로 허용한 7·1 조치 이후 가정 내 시장 활동을 하는 사람이 여성이라는 응답이 남녀 모두에게 8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박희진, 2010: 97). 또한 북한 여성이 생존을 위해 택한 방법은 사경제활동 외에 매춘도 있었다고 한다(임순희, 2004). 또한 최근에 인권단체인 휴먼라이트워치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사경제활동의 과정에서 북한 여성들이 북한 관리들에게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12].

분단체제가 남과 북 각각의 내부에서 경제, 사회적 안보뿐 아니라

---

11) 북한의 노동력 배치 기준은 생산부문과 비생산부문으로 구분한다. 생산부문은 공업, 농업, 기본건설, 대보수, 운수, 체신, 지질탐사, 설계, 기자재공급이며, 비생산부문은 상품유통, 편의봉사, 수매, 양정, 국토관리 및 도시경영, 교육, 문화, 보건, 과학 부문 등이다(박희진, 2010: 97).

12) <https://www.hrw.org/report/2018/11/01/you-cry-night-dont-know-why/sexual-violence-against-women-north-korea?fbclid=IwAR1IWfT1vv5jg_MrcVnt96ATqUXAsWXkCA0ipwjFqMySAk7k6hTdmMm_vE8> (검색일: 2018.11.1).

www.kci.go.kr

여성의 안보를 위협하는 구조와 더불어 분단체제 자체에서 발생하는 여성의 안보 문제가 있다. 바로 경제적 위기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서 국경을 넘는 북한 여성들이 접경 지역은 물론, 이주의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매매(sex trafficking)와 성폭력의 문제이다.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으로 정착하는 주민 중에 여성이 비율이 거의 7-80%에 이르면서 '이주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tion)'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탈북 여성이 국경을 넘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현실은 브로커에 의한 매매혼의 형태이다. 탈북 여성 중에서 41%가 중국 현지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으로 드러났고, 대부분이 초혼한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Lankov, 2004: 860). 탈북 여성이 매매혼을 통해 결혼이라는 경로를 통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도시에서 식당, 마사지 숍, 술집 등에서 (유사)성 노동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김성경 2013, 242). 이는 제3세계 이주 여성이 선진국의 가사서비스나, 성 산업, 감정 노동이라는 전 세계적 노동구조에서 가장 밑단에 위치한 일을 맡게 되는 '감정노동의 상품화' 혹은 '노동의 국제 분업'의 한 측면과 상통한다.

이는 분단체제로 경제적 위기에 몰린 북한 여성들이 북한을 이탈하면서 성폭력과 매매, 그 외에 생명을 위협받는 안보의 위기 상황에 몰린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젠더적 국제정치가 얘기하는 안보가 국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단위를 넘어서서 인간의 안보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로 지점이다.

3. 한반도 평화·인권의 증진을 위해 고려할 지점: 젠더적 국제정치 관점

젠더적 국제정치 관점은 이처럼 사회적으로 구성된 남성성 우월의 체제나 논리를 벗어나 다양한 "타자"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인식론적

www.kci.go.kr

재구성(Epistemological constitutive)을 시도한다. 그런 관점에서 여성 안보의 문제 외에 젠더적 관점에서 억압받는 평화의 문제를 살펴본다.

먼저 북한에 대한 인식은 타자와 자아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즉 한국 전쟁을 일으킨 주범이자, 안보를 위협하는 타자로 인식할 경우, 북한은 안보의 주적이 되고 따라서 주적을 없애는 방식의 현실주의적이고 공격적인 대안이 나온다. 반면 한반도의 분단이 냉전이라는 거대체제의 영향에 따른 것이고, 같은 민족이라는 자아로 인식할 경우,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번 판문점 선언 이후에 북한에 대한 정보가 늘어나면서 확인하는 것과 같이 북한은 하나의 단일한 정체성을 가진 대상이 아니다. 북한 자체도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북한 내부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북미 사이에 교착상태를 일으키는 북한의 비핵화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비핵화가 한반도 평화에 필수적임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다만 지금과 같이 북한이 먼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핵을 제거한 이후에야 제재를 해제한다는 입장이 위협이 되는 것을 모조리 제거해버린다는 '거세'의 차원이 있다. 북한은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공동성명'에서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를 확인하였다. 이는 미국이 제시해왔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를 수정하여 받아들인 것이다. 북한은 "CVID는 패전국에만 강요하는 주장으로 우리의 평화적인 핵계획을 송두리째 말살하는 굴욕적인 것"(정창현, 2018)이라며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콘(Cohn)은 핵을 다루는 미국의 지식인들이 대부분 남성인 것과 더불어 그들이 사용하는 '기술 전략적(technostrategic)' 담론이 젠더화된 것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1980년대 미국에서 핵의 전략적

www.kci.go.kr

차원을 다루는 지식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위험성에 무감각한 합리성에 기반한 용어인데 반해, 핵을 지칭하는 용어들은 성적 표현이 대다수로 젠더화되었다고 비판했다. 언어는 발화자의 지위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한데, 핵전략가들이 사용하는 젠더화된 언어는 실제 정책에도 영향을 준다. 미국 핵전략 지식인들은 비핵화(disarmament)를 거세(emasculation)와 동일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미국 군대는 절대 핵무기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본다(Cohn, 1987; Blanchard, 2003). 이런 관점에서 미국이 북한에 철저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요구하는 것은 반대로 북한을 완전하게 거세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탈식민지적 페미니즘[13]의 입장에서 합리성을 가진 미국이 합리적이지 않은 불량국가 북한을 철저히 비핵화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9·19 평양선언'에서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의 참전하에 폐기하기로 했으며, 미국이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도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경제적 제재 때문에 북한 인민들의 경제적 안보는 취약하고, 더구나 환자들의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건강상의 취약상태에 놓여있다. 비핵화와 북미관계개선 혹은 경제적 제재의 완화가 '행동대 행동'으로 순차적인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의 과정에서 분단 극복 이후의 '평화체제' 형태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분단의 극복이 어떤 형태로 진전될 것인지에 대해 논쟁이 있다. 분단의 극복 이후에 남과 북을 서로 국가로 인정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방안과 민족의 관점에 입각한 통일 방안이 그 쟁점이다. 최장집은 '분단체제' 담론 자체가 민족

13) 탈식민주의가 이분법적이고 위계적인 지배관계를 은유하는 것이라면,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은 이분법적 위계관계를 종식시키고 성별·인종·문화·민족 등에 내재한 지배적 권력관계를 반전시키고자 하는 기획이다(이나영, 2006).

www.kci.go.kr

주의에 기초해 있고, 남과 북 사이에 오랜 분단으로 생긴 이질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통일가능성을 제거한' 두 민족 국가 사이의 평화공존을 제시하였다. 이에 백낙청은 통일을 배제하는 것은 남과 북의 수구 세력을 유지시키는 분단체제를 지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분단 이전 상태의 복원'이 아닌 남북국가연합의 과정을 통한 민족에 기반한 통일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에서도 드러나듯이 현 상태에서 통일을 논하는 것이 두 체제의 상이성을 부각시키며 갈등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평화가 더 중요한 이슈이다. 남과 북은 서로 다른 국가성을 띠면서도, 같은 민족이 분단된 특수 관계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1991년 남북 합의서에 따라 남북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이다. 이 특수 관계가 북한의 반국가 단체성을 무시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남과 북이 평화를 전제로 하면서 상대를 반국가단체나 적대적 관계로 볼 수는 없다. 이는 국내질서 유지를 위해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게 하는 주권 관점을 비판하는 페미니즘 국제정치에서 볼 때, 평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남북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해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연합제가 꼭 하나의 주권이 아닌 남과 북의 공존을 통해 이후 통합 형태에 대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는 점에서 의미 있다.

셋째, 한반도의 분단을 극복하는 논리로 '민족' 개념을 강조하는 것은 다양화된 현실에서 차별적 개념이 된다 판문점 선언에서 "민족의 혈맥"을 잇기 위한 협력으로, '하나의 핏줄, 하나의 언어, 하나의 역사, 하나의 문화'라는 담론은 다양성을 배제하는 언어이다. 물론 '민족'이라는 개념이 분단된 남과 북을 잇는 정서적 공통점인 것은 분명하지만, "민족" 개념은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과 더불어 또 하나의 차별적 언어이다. '민족'이 정체성의 구분 기준이 된다면, 현재

www.kci.go.kr

결혼 이주로 이미 다민족 가족 형태로 변화한 가구가 많고, 상주하는 외국인이 200만 명이 넘는 남한의 상황에서 이민자의 안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천정환, 2018).

실제 독일의 경우, 2차 대전의 경험에서 '민족' 개념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동서독을 연결하는 가장 기저에 '민족적 정서(Nationalgefühl)'를 공유했다. 통일 이후에 내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나온 구호도 '우리는 하나의 민족(Wir sind ein Volk)'이었다. 그 과정에서 독일 내에 이주민들이 갖는 소외감이 새롭게 대두되면서 내적 통합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다. 실제 2018년 독일통일의 날에 이주민 연합에서 독일 통일만 지정할 것이 아니라 '다양성의 날'을 정해 통합을 이룰 것을 주창하였다[14].

뿐만 아니라 통합의 관점에서 같은 민족이지만 그 내부에서 차별과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특히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등 시민화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실제 독일 통일 이후에 동독 출신 주민들이 겪은 소외감은 내적 통합에 큰 과제이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지 20년 후인, 2009년 독일연방정부의 연례보고서에서 "내적 통일에 여전히 결함이 남아있다"(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Bau und Stadtentwicklung, 2009, 30)고 고백할 만큼 내적통합은 복잡한 문제이다. 실제 남한 사회에서 북한 이탈주민들도 제대로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하면서 경제적 차별은 물론 사회적, 심리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 따라서 탈민족적 관점에서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는 평화적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북한을 개발론적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북한 내부의 경제적 안보를 해결해 나갈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독

14) <https://neuedeutsche.org/de/artikel/warum-nicht-auch-einen-tag-der-deutschen-vielfalt/> (검색일: 2018.12.15.) 이 글에서 독일 내 이주민들은 실제 통일과정과 이후에 인종적 차별을 느꼈다고 밝혔다.

www.kci.go.kr

일의 경우에도 경제적 통합 과정에서 서독 체제로 병합되면서 동독이 느낀 소외감을 프리츠 빌마르(Fritz Vilmar)와 볼프강 뒴케(Wolfgang Dümcke)은 '식민화 테제(Kolonisationsthese)'로 정리했다. 실제 화폐 통합 과정에서 동독과 서독의 화폐를 1:1로 교환하면서 동독 경제가 과대평가되고 서독 경제체제에 의존율이 높아졌다. 반면 사회주의 체제에서 100% 보장되던 노동권이 통일 이후 헌법에 보장되지 못하고 서독 방식으로 정리되면서 동독인들은 '구 동독에 대한 향수(Ostalgie)'라는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소외감과 상실감을 느꼈다(한운석, 2010: 253). 이러한 동독 경제의 통합은 비단 서독에 식민화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유럽 통합 과정의 일부이자, 당시 세계화의 한 국면에서 급격하게 세계화에 통합되면서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에 식민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진정한 통일'의 문제를 정치나 체제의 문제가 아닌 인간의 문제, 즉 문화의 문제로 인식하는 '문화적 전환'이 필요하다(김누리, 2006). 젠더적 국제정치는 이러한 문화적 차이도 넘어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7년 베를린 선언부터 2018년 평양선언이 나오는 과정에서 북한과 평화의 진전과 동시에 북한의 경제적 번영을 경제협력 계획이 발표되었다. 서해경제특구와 동해경제특구를 조성하면서 북한의 값싼 노동력, 풍부한 지하자원과 물류 수송의 이점을 살려 북한을 시장 특수로 보려는 관점은 북한을 개발의 대상으로 보는 식민주의적 관점일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조문영, 2018; 구갑우, 2016).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구상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300만 달러 이상 수출 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30만 산업 인력을 양성하며, 400억 달러 상당의 국제협력자금을 투입해서 국민소득 3000달러로 도약시켜주겠다는 발전주의적 사고의 전형이다. 이런 개발론적 접근이 아니라,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북한이 내부의 경제적 안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www.kci.go.kr

페스트라이쉬(Pastreich)가 제안하는[15] 지역농업과 소형 제조업에 기반한 공유 경제(common economy) 체제와 친환경적인 에너지 정책은 북한이 급격한 신자유주의 시장체제에 종속되지 않고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Ⅳ. 결론

지금까지 2018년에 불어닥친 한반도의 정세변화가 평화체제 차원을 넘어 평화·인권을 진전시키기 위해 어떤 문제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젠더적 국제정치의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젠더적 국제정치의 시각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나 평화공존 문제를 다룬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가 다른 지역에서 평화체제나 평화공존의 문제를 젠더적 국제정치의 시각으로 다룬 연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를 보다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견인하기 위해 분단과 결부된 젠더의 관점에서 제기되는 안보의 문제들을 논의할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젠더적 국제정치론은 본질과 실체를 가지기 보다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인식틀을 제공하여 새롭게 현실을 해석하도록 돕는다. 국가 차원의 안보 접근이 내부의 인간안보 문제를 외면하고 억압하면서 오히려 적극적 평화를 해치는 지점을 비판한다. 특히나 젠더 관점으로 억압받는 모든 사람들, 특히 여성들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을 요구한다. 평화체제가 국가들 사이의 협상의 차원에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 평화와 인권이 정착되기 위해 글에서 제시한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보다 넓은 관점이 필요함을

15) Emanuel Pastreich. 2018. “North Korea and ‘The Commons’: Blank slate for a new kind of nation?” *Asia Times* 24 October. <http://www.atimes.com/north-korea-and-the-commons-blank-slate-for-a-new-kind-of-nation/> (검색일: 2018.12.12.)

www.kci.go.kr

보여준다. 예를 들어 분단체제로 발생한 여성과 소수자의 안보, 북한 핵개발 과정에서 인간의 삶과 연관된 경제부문을 소외시킴으로써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개별 인민들이 직면하게 되는 경제 안보, 또 탈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보 문제 등은 평화체제가 확립되기 전이나 후에도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실천적 과제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젠더적 접근은 젠더라는 렌즈를 통해 안보의 개념이 외부 국가로부터 위협을 막는 것만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젠더 방식으로 나타나는 소외와 차별 등을 해소하는 인간안보까지 확대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젠더적 접근은 전쟁의 부재라는 소극적 평화를 넘어 사회 경제적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 평화라는 적극적 평화 접근과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젠더적 접근은 폭력이 발생하는 기원, 즉 남성성/여성성, 문명/비문명, 선/악이라는 이분법이 갖는 폭력을 드러냄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인간들의 생활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폭력과 평화의 문제를 제기한다. 지금 현재 정전협정이 폐기되지 못하고 평화체제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현재에도 발생하고 있는 많은 폭력의 문제들, 그리고 평화체제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드러나는 잠재적 폭력의 문제들, 남한과 북한은 서로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 민족적 개념이 갖는 이주민에 대한 차별의 폭력, 발전주의적 접근이 갖는 식민주의적 폭력 등등. 한반도의 평화는 단지 평화협정을 맺는 제도적 차원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과 폭력을 인식하고 그 차이, 정체성을 인정하는 방식을 준비하고 연습해야 한다는 함의를 준다.

(논문접수일: 2018. 11.12, 논문심사일: 2018. 11.29, 게재확정일: 2018. 12.11)

www.kci.go.kr

참고문헌

구갑우. 2007.『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 서울: 후마니타스.

구갑우. 2016. “탈식민·탈패권·탈분단의 한반도 평화체제.”『안보개발국가를 넘어 평화복지국가로』. 사회평론 아카데미.

구갑우. 2018. “판문점선언에서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의 경로.”『동향과 분석』. 29-35.

권인숙. 2000. “우리 삶 속의 군사주의.”『여성과 평화』 1: 133-161.

김누리. 2006.『머릿속의 장벽: 통일 이후 동서독 사회문화 갈등』한울아카데미.

김성경. 2013. “북한이탈주민의 월경과 북·중 경계지역: ‘감각’되는 ‘장소’와 북한이탈여성의 ‘젠더’화된 장소 감각.”『한국사회학』 47(1): 221-253.

김은실. 2002. “지구화, 국민국가 그리고 여성의 섹슈얼리티.”『여성학논집』 19: 29-46.

김종엽. 2005. “분단체제와 87년 체제”『창작과비평』 33(4): 12-33.

박정미. 2014. “발전과 섹스.”『한국사회학』 48(1): 235-264.

박희진. 2010. “7·1 조치 이후 북한 여성의 사경제활동.”『통일연구』 14(1): 93-125.

백낙청. 1994. “분단시대의 최근 정세와 분단체제론.”『창작과 비평』 22(3): 238-258.

서보혁. 2012. “한반도 비평화 구조와 작동양식.”『한반도 비평화 구조와 분단』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 평화인문학연구단.

서보혁. 2015. “분단체제와 인권문제: 북한인권 논의의 재설정.”『통일인문학』 61: 471-500.

손호철. 1994. “‘분단체제론’의 비판적 고찰.”『창작과 비평』 22(2): 316-345.

손호철·방인혁. 2012. “남북한 ‘적대적 의존관계론’에 관한 비판적 연구: 1972년 남한 유신헌법과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정을 중심으로.”『한국과 국제정치』 28(2): 1-28.

스미스, 헤이즐. 2017.『장마당과 선군 정치』. 김재오 옮김. 파주: 창비.

스콧, 조운. 2001. “젠더와 정치에 대한 몇 가지 성찰.”『여성과 사회』 13:

www.kci.go.kr

210-249.
신욱희. 2012. “북미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한국정치외교사논총』33(2): 35-61.
이나영. 2006. “초/국적 페미니즘: 탈식민주의 페미니스트 정치학의 확장.” 『경제와사회』 70: 63-88.
이동기. 2012. “디터 젱하스의 평화이론: ‘복합구성’으로서의 평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HK평화인문학연구단 편. 『한반도 비평화 구조와 분단: 이론과 실제』.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평화인문학연구단.
이병천. 1995. “냉전분단체제, 권위주의정권, 자본주의 산업화: 한국의 경험.” 『동향과 전망』 12: 64-96.
이종석. 1998.『분단시대의 통일학』. 서울: 한울.
이혜정·박지범. 2013. “인간안보: 국제규범의 창안, 변형과 확산.” 『국제·지역연구』 22(1): 1-37.
임순희. 2004.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4(3): 1-108.
장달중·이정철·임수호. 2011.『북미대립』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정진성. 2018. “평화권 논의의 구조와 전망.” 『인권연구』 1(1): 1-35.
정창현. 2018. “2018년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남북연합.” 『역사와 현실』 108: 3-14.
조문영. 2018. “‘프런티어 시장’ 북한과 식민주의 유령” 「한겨레」 (2018. 5. 9. 일자).
조효제. 2018. “인권 실현의 통합적 접근.” 『인권연구』 1(1): 37-71.
천정환. 2018. “다시, 우리의 소원은 통일?- 4·27 판문점 선언과 북미회담 전후 통일·평화 담론의 전변.” 『역사비평』 : 361-391.
한운석. 2010. “통일 독일의 사회·문화적 통합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한반도는 통일 독일이 될 수 있을까?』.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함택영. 2014.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현대북한연구』 17(2): 260-295.
황영주. 2013. “페미니즘 안보연구의 기원, 주장 그리고 분석.” 『세계정치』

www.kci.go.kr

19: 21-53.

Blanchard, Eric M. 2003. “Gender,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Feminist Security Theory.”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28(4): 1289-1312.

Bruguieres, Mary. 1990. “Feminist Approaches to Peace: Another Step for Peace Studies.” *Millennium* 19(1): 1-18.

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Bau und Stadtentwicklung. 2009. *Jahresbericth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

Carver, Terrell. et al. 2003. “Gender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5(2): 287-302.

Cohn, Carol. 1987. “Sex and Death in the Rational World of Defense Intellectuals.”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12(4): 687-698.

Confortini, C. Catia. 2006. “Galtung, Violence, and Gender: The case for a Peace Studies/Feminism Alliance.” Peace & Change 31(3): 333-367.

Enloe, Cynthia. 1989. *Bananes, Beaches and Bases: Making Feminist Sense of International Politic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Galtung, Johan. 1969. “Violence, Peace, an Peace Research.” *Journal of Peace Research* 6(3): 167-191.

Galtung, Johan. 1990. “Cultural Violence.” *Journal of Peace Research* 27(3): 291-305.

Haas, Ernst. 1958. *The Uniting of Europ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al Forces, 1950-1957*.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Hoogense, Gunhild & Svein Viceland Rottem. 2004. “Gender Identity & Subjdect of Security.” Security Dialogue 35(2): 155-171.

Lankov, Andrei. 2004. “North Korean Refugees in Northeast China.” *Asian*

www.kci.go.kr

Survey 44(6): 856-873.

Moon, Katherine H.S. 1997. *Sex among allies: Military Prostitution in U.S.-Korea Relations*. Columbia University Press.

Peterson, V. Spike. 1992. *Gendered States: Feminist (Re)visions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Boulder: Lynne Rienner.

Sylvester, Christine. 2007. "Whither the International at the End of IR." *Millennium* 35(3): 551-573.

Sylvester, Christine. 2010. "Tensions in Feminist Security Studies." *Security Dialogue* 41(6): 607-614.

Tickner, J. Ann. 1992. *Gend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Perspectives on Achieving Global Securit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Tickner, J. Ann. 2004. "Feminist Responses to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Peace Review* 16(1): 43-48.

Tickner, J. Ann. 2005. "Gendering a Discipline: Some Feminist Methodological Contributions to International Relations."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30(4): 2173-2188.

Tickner, J. Ann. 2006. "Feminism meets International Relations: Some methodological Issues." in Brooke A. Ackerly, Maria Stern and Jacqui True (eds.). *Feminist Methodologies for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Waltz, Kenneth.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McGraw-Hill.

Webel, Charles and Johan Galtung. 2007. *Handbook of Peace and Conflict*. Routledge.

www.kci.go.kr

<Abstract>

A study on recent changes in the Korean Peninsula and a peace regime

: based on a gender analysis of International Relations

Chang, Hee Kyoung*

Recently expectations are rising high regarding the possibility of ending the armistice regime with North Korea, and the establishment of peace as a consequence of three summit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one summit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Based on a feminist IR perspective this article explores the effects of these recent changes on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the promotion of peace and human rights. Drawing on gender analysis the feminist IR perspective represents an epistemological turn that proposes a new conceptual approach to security and peace.

This approach criticizes the state concept that pursues state security against an external threat based on the idea of the Hobbesian anarchy reflecting masculinity only. Alternatively, the feminist IR perspective asserts that it is necessary to overcome internal-external state dichotomy for guaranteeing security, and remove the causes of structural violence that suppress personal security within the state. In that sense, this alternative perspective extends the concept of security toward 'human security', which problematizes human insecurity due to structural violence.

* Free University in Berlin.

www.kci.go.kr

Against this backdrop, this article addresses issues occurring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 general, and regarding women's security issues in particular arguing that structural violence stems from the effects of the divis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analysis examines the meaning of recent changes in 2018 regarding peace and human rights, and based on a feminist IR perspective reflects about what has to be done to achieve a proper peace regime by providing insights on how to overcome division and induce co-existential peace. The key argument draws on the concept of identity, and highlights the problem of involved actors' perception of ego and alter. Consequently, for instituting a peace regime it is necessary that North and South Korea do not objectify each other but must perceive each other in co-existence, and cooperate for jointly removing the source of the structural violence. In this way, the feminist IR perspective provides a meaningful approach that enables to recognize the problem of human security due to structural violence, while particularly emphasizing women's security.

Key words: gender analysis on international relation, peace regime, structural violence, human security, epistemological constitutive

www.kci.go.kr